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5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인쇄업 파산 직면(?)

‘인쇄업이 전면적으로 파산할 소지가 크다’

전쟁 후유증으로 1950년대 중반기는 일반 상업 인쇄를 비롯한 모든 인쇄업 경기가 급격히 하락했다. 인쇄문화시보는 1955년 5월22일자(제16호) 사설을 통해 과잉 시설의 억제와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이전인 수격 행정 논리를 꼬집었다.

시보는 이미 중업원의 월급조치 주지 못하고 있는 활자 인쇄소들이 비밀비재하고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대규모 인쇄 기자재 설치를 방관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보는 인쇄업이 '수요의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원인에 대해 검인정교과서와 일반참고서 부문에까지 무분별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대규모 인쇄업체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인쇄업자들의 전체적인 붕괴와 도산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한 내용이었다.

지기 · 인쇄계의 베테랑

지기 · 인쇄 공업 부문에 노사간 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덕장.

1969년 5월1일자(제384호) 인쇄문화시보는 노동 ·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 업계의 인물로 김기훈 삼보인쇄제기공업사 사장에 대해 치하했다. 당시는 이제 막 산업 구조가 다각적으로 활성화되던 시기. 임금 문제와 구조조정 등 노사간에 간헐

적으로 불거져 나왔던 고질적인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이슈를 던져주지 못할 만큼 심각했다. 제주도 출신인 그는 16세 소년 시절에 청운의 꿈을 품고 일본에 건너가 독학하면서 일본인 지기 공장에 취업한 것이 지기 업종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

시보는 그가 이처럼 노사간의 융합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지기업계 내에서 입지를 굳혔던 배경에 대해 '당시 일본에서도 유행처럼 번져 나갔던 노사 문제를 몸소 체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세 파악 괴리 커

인쇄용지 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공급업자와의 전지 값에 대한 시세인식 차이(물당 1천원)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문화시보는 1971년 5월1일자(제432호) 보도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이 특히 관수 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민간 업체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가 관수 물자를 조사할 때 원가 산정 자료로 경제단체나 정부관서 등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는 물가 시세를 참작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맹점이 있었던 것. 바로 시간적인 차이와 함께 인

쇄 용지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수입품의 성질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보는 "보통 3개월만 지나도 정부가 파악하는 것과 납품업자가 갖는 시세의 괴리가 커 이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이 시급하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계 당국의 현실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밀반입 상황 심각

사진식자기 등을 포함한 인쇄 기자재들이 포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설치됐거나 대기중인 기자재들이 한계를 넘어 섰다. 1972년 5월15일자(제455호) 인쇄문화시보에 게재된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재일 교포들이 재산 반입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내에서도 거의 폐기 처분 상태에 있는 기자재들을 마구잡이로 반입하고 있다는 것. 시보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업계 기술 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물량을 수주 받아 납품하는 경우, 전혀 다른 인쇄물이 생산돼 사업주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보는 '암적인 요소를 내포한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수식어를 끌어 붙이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또 전혀 쓸모 없는 고철 덩어리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녹이 쓴 상태로 세관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



최고 속도 1만5천매

시간당 최고 1만5천매를 생산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기가 출시됐다. 인쇄문화시보는 1979년 5월 1일자(제608호)에 당시 기술로는 최대 1만매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인쇄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됐는데 이번 1만5천매 생산 규모의 인쇄기가 도입된 것은 소량 다품종 시대의 까다로운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제품은 '라피다 SRO'라고 칭해졌으며 당시 서독의 케니취·바이위사가 출시했다. 물론 인쇄기 주변 기기들이 고급화되고 있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진보를 보여준 것이었다.

일본 전시회에 이미 그 첫 모습을 선보인 '라피다 SRO'는 국반절 2색기로 기계의 상태와 품질 안정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평을 받았다. 시보는 특히 매당 1만5천매라는 경이로운 속도 외에 미술평판에 대한 물량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굵은 압통(직경 360mm)에 최대 종이 크기(510×720mm)의 성능을 자랑했다.

사업장 이전 광고

1980년 5월 16일자(제634호) 인쇄문화시보의 1면 하단 광고에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는 문구와 함께 재미있는 광고가 하나 실렸다. 양지산업(대표 조병우)이 사무실을 남영역 주변의 원호로 1가로 옮기고 사업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다. 흔히들 말하는 이전 광고다. 요즘처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첨단 IT 시대에는 다른 전달 매체들이 흔하지만 별다른 수단이 없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광고에는 이전 약도와 함께 전화번호 개통 시기, 텔렉스 고유 번호까지 상세하게 기재됐다. 당시 이 업체의 취급 품목은 인쇄기(하리스 오프셋, 고모리 매엽) ▲제본기(콜부스 양장, 하리스 무선·충철) ▲재단기(이또 자캅) 등이 주류를 이뤘으며 주소, 사진 식자 부문도 부분적으로 취급했다.

군인들도 인쇄업에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까지 상업 인쇄에 뛰어들 것인가.

1991년 5월 24일자(제814호) 인쇄문화시보 1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머리 기사는 영세인쇄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당국의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쇄연합회가 제시한 시정 건의서를 토대로 게재된 이 보도는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가 대규모 시설 확충을 통해 본격적으로 상업 인쇄에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일간 신문사 등을 비롯한 대기업이나 비영리단체들이 끊임없이 상업 인쇄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던 상황.

시보는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1일과 9일에 국방부와 기협 중앙회에 보낸 건의서를 토대로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각 관련 단체

장들의 공동된 입장을 인용하며 정부의 땀질식 행정처방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이에 대해 시보는 군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도 좋지만 인쇄업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시안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 문서인식 S/W 등장

정보 입력의 자동화가 실현된 문자인식 S/W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1995년 5월 5일자(제906호) 인쇄문화시보에 보도된 이 기사는 삼흥시스템(대표 백흥기)과 경북대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NEURO OCR'에 대한 특징이 기술됐다. 시보는 자동화로 급변하고 있는 인쇄·출판 산업에 발맞춰 출시된 부문에 가장 큰 초점을 맞췄으며 타 산업으로의 보급을 통해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산학 협력에 의해 개발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호평했다. 'NEURO OCR'은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문자 인식으로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적용됐고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시보는 미국과 일본 등 당시 문서 분야 선진국으로 자임하고 있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손색없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국내 인쇄·출판의 자율화를 한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장홍일 기자)